

#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행안부장관〉

2일 본회의의 처리 예고... "마지막 한번 더 기회 주는 것"

해임건의안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 추진 의사도 표명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다. 이태원 참사 책임 추궁 차원의 조치로 해임건의안 거부 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발의 후 12월1일 본회의의 보고, 12월2일 본회의의 처리로 일정을 예상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 배경으로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고 "국가적 대참사 충격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 끌기, 꼬리 자르기 낚 탕으로 뭉갰다"고 했다. 또 "재난 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경찰 소방 지휘라인의 정점에 있는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참사 발생 대처 과정에서 수차례 상황을 오관하고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휘 권한과 법적 책임 없다. 폼 나게 사표 쓰고 싶다는 말로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면서 "국회에 출석해서는 희생자 유가족 명단과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짓말도 버젓이 내놨다"고 했다. 또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나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며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이 장관은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스스로 판단하고 물러나는 것을 기다려 왔지만 여기에 대통령과 장관은 응답하지 않았다"며 해임건의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해임건의안은 입법부의 공식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데 방점이 있다"며 "해임건의안을 또 다시 거부하거나 자진사퇴를 끝내 거부하면 강제적 방법인 탄핵소추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 추진을 함께 고민해 왔다. 강제성이 있



위상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수진 원내대표인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 의안과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는 곧바로 탄핵소추를 추진하지는 견해도 일부 있었다. 단계적 접근 방향으로 중지가 모인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 측이 이 장관 인사 조치 문제, 국정조사 등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 대응할 수 있다는 관측엔 "하당 시절의 뭇된 습성을 버리지 못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모든 것을 문재인 정부, 이재명 대표, 민주당 탓을 하고 있지 않나"라며 "국정조사는 국정조사이

다. 국민 기대에 입각한 것이고 여야 합의로 국민 앞에 발표한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도 마친가"라며 "언제까지 야당 탓하며 모든 사안을 연계시켜 극한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건가", "상호 연계 시키는 것이야말로 전략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위상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 의안과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뉴스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의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쌀값 하락·생산비 폭등 고통받는 농민 외면 말라"

도의회 농산경위 소속 의원들 "단순한 농촌 문제 아나 위기 몰린 농업·농촌 살리기 위해 도 차원 대책 마련을"

"전라북도는 쌀값 하락과 생산비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을 외면하지 말라"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 소속 의원들이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의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사상 초유의 기록적인 쌀값 하락에도 전라북도가 정부 눈치만 보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위기 몰린 농민들은 결국 쌀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농업·농촌의 소멸은 식량안보 위기, 국가 소멸 위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쌀값 폭락 문제는 단순한 농촌 문제가 아닌 국가적 위기로 위기

에 몰린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북도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도의회는 쌀값 하락 방지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발의하고 도정질의와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전라북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도의회는 농업인 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 등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은 전북도가 농민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경수기자

## 전북 삼락농정대상 수상자 선발·시상

보람찾는 농민, 최승일  
제값받는 농업, 손종업  
사람찾는 농촌에 완주  
귀농귀촌협의회 선정

전북도 농생명산업을 선도하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높인 인물 등을 발굴하는 삼락농정 대상 수상자들이 선정됐다. 전북도는 지난달 30일 보람찾는 농민 부문에 최승일(사)김제도농협력사업단장, 제값받는 농업 부문 손종업 진안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 대표, 사람찾는 농촌 부문 완주군 귀농귀촌협의회에 각각 삼락농정 대상을 시상했다.

보람찾는 농민 대상에 뽑힌 김제시 최승일씨는(사)김제도농협력사업단을 구성해 단장으로서 6차산업 협력체 기틀을 마련했다. 김제농협과 함께 로컬푸드직매장 개점을 통해 농산물 판로를 확대했으며 다양한 체험마케팅 추진으로 도농 교류의 장을 개척하는 등 전북 농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제값받는 농업 대상 수상자인 진안군 손종업씨는 현재 진안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 대표로 유기농배려 협동조합을 창립하였으며 친환경 브랜드 '오가진' 상표 출원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또한 진안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을 서울에 개장해 수도권 판로를 마련할뿐 아니라 2019년 진안로컬푸드직매장을 개장해 2022년 누적매출 200여원을 달성하는 등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기여했다. 사람찾는 농촌 대상에는 완주군 귀농귀촌협의회가 뽑혔다. 2012년에 설립된 이후 귀농귀촌 홍보를 위한 박람회 및 홍보관 등을 운영해 귀농귀촌 유치에 힘쓰고 나아가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멘토, 인턴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메달이 수여됐으며 전북도 농식품 인력개발원의 교육 강사로 우선 위촉되는 등 조예에 정한 예우를 받게 된다. /김경수 기자



전북 수출기업 애로해소 간담회

지난달 30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수출기업 애로해소 간담회에 김관영 도지사과 일진재량 등 9개 도내 수출기업들이 규제개혁을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 산림 핵심기반시설 '임도' 계획 제도 체계화

민주 윤준병 의원, '산림자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익사업 위한 토지 등 취득·보상법 개정안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지난달 30일, 임도시설 확대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임도(林道)는 숲을 가꾸고, 생산된 목재를 수집하며, 재해를 예방하는 등 산림의 적절한 유지와 관리에 꼭 필요한 핵심 산림 기반시설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대형산불에 신속 대처함으로써 탄소흡수원 유지·증진에 기여하는데, 최근 대형산불 발생 시 임도 설치 여부에 따라 산불 조기 진화 여부가 좌우되는 등 산불 대책의 주요한 요소로도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임도(林道)는 산림관리와 산불 예방·진화의 필수 기반시설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임도 설치비율이 임업선진국의 1/5 이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산림에서 사유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하므로 전체 임도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유림에서의 임도 확충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임도밀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임도망 구축을 위해서는 임도 설치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관련 법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임도 관리주체

를 법률로 규정하고 10년 단위의 임도기본계획 및 5년 단위의 임도 설치계획 수립 등 임도계획 제도를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윤 의원은 임도(林道)가 가진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임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산림자원법' 개정안에 마련했으며, 이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임도(林道)는 산불 발생 시 방화선 역할과 함께 진화요력 등 차량의 진입로 및 야간 지상진화 등에 필요한 필수 기반시설이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사유림의 임도도밀도는 국유림의 3/4 수준으로, 현행 산림자원의 산주들의 사정이행 규정만으로는 임도 설치 추진에 어려움이 다수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면서 "공익적 기능을 가진 임도가 실질적으로 확대설치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입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임도의 설치를 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학수 정읍시장 법정형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即以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에 위치한 임야와 밭 16만 7,081㎡(9만5,42평)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 측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 디지털성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근거 마련

김정수 도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더불어민주당, 익산2) 의원이 제396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



에서 발생하는 각종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실례조사 실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피해자 법률구조 연계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김정수 의원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대중화되며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경수기자

## '전북자용센터 관련선거 의혹'... 검찰, 무더기 기소

전북자원봉사센터 관련선거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무리됐다. 전주지검 형사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당대 경선운동 방법 위반)등 혐의로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 및 송 전 지사의 측근, 현 전북자원봉사센터장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모집하고 입당원서 사본과 관리당원 명부 등을 관리하며 당내 경선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송 전 지사의 업적을 홍보한 뒤 관리당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이 같은 범행을 위해 가족·친인척 등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모인 입당원서 사본들은 전북자원봉사센터로 옮겨져 '관리당원'으로 관리됐다. 당원명부는 엑셀파일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부에 적힌 이들은 전주 외에도 도내 14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이 같은 혐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했다. 확보된 입당원서 사본 3,000장과 관리당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파일에 명단은 1만여명에 달했다. 경찰은 당초 2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한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수사대상이 너무 늘어나자 1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한 이들로 기준을 정했다. 이렇게 배어난 입당원서의 총착자는 전북자원봉사센터였다. 뒷선으로 가는 핵심 키로 불렸던 전 자용센터장 A씨가 구속됐고 수사는 속도가 붙었다. 경찰은 이번 관련선거의 정점으로 송 전 지사의 부인과 전 비서실장 등 7명을 지목했다. 결국 검찰에 30명의 피의자들이 송치됐다. 검찰은 기소한 인물 외 16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와 불기소 처분 했다. 이 처분을 받은 이들은 지인의 부탁을 받아 입당원서를 받아온 점, 공무원 신분인 아닌 점, 모집한 당원의 수가 적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참작사정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관련자료를 매우 방대했다"면서 "다양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혐의입증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뉴스